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충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온실가스 24% 줄인다

산업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부품기업 1000곳 미래차 기업 전환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정부가 친환경차를 2030년까지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또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수소차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 확산 등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산하연 전문가 포럼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되면서 공개된 바 있다.

앞선 3차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친환경차 누적보급은 82만대, 수출은 28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은 각각 세계 1위, 세계 8위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과 수출이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 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 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

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를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를 달성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토록 했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된다. 택시·트럭·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 폭이 커진다.

친환경차 도입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충전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설치한다.

친환경차 가격을 2025년까지 1000만 원가량 낮추는 정책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만료 예정인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전비도 kWh당 6.5km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kg당 400Wh)도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 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배터리 무게 40%가량 가볍기 때문에 전비 개선에도 용이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 관련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에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되고, 이런 표시가 있을 경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월24일부터 20일간 행

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물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보급 '軍 육면전투화' 물 스미고 가루날려 품질불량

계약방식 '최저가 입찰제' 전환 후
장병들 불만... 균등 품질관리 절실

육군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급된 '육면 전투화'가 품질관리 불량으로 장병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군납품의 균등한 품질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익명의 육군 간부는 본지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육면전투화 가죽의 품질불량 상황을 제보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군 피복물에서 구매한 육면 전투화 신품에 가죽 부스러기가 묻어나고, 전투화 곳곳에 오염된 흔적이 있는 채로 출하가 됐다.

◆전투화 납품업체에 따라 다른 품질

제보자는 평소 육면 전투화의 보급이 원 개발사인 트렉스타가 아닌 타사 제품이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우들로부터 자주 접해, 동료의 트렉스타 육면 전투화와 군에 납품된 타사 전투화 앞쪽에 사위기를 틀어 발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원 개발사 전투화의 경우 물 방울이 구르듯 떨어져 나가다 천천히 젖어들어간 반면, 타사 전투화는 금방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육군 간부는 육면전투화의 가죽이 '썩은 천' 같아 일어나고, 가죽부스러기가 일어나는 등 개발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가죽 품질에 큰 차이가 난다고 제보했다.

육면 전투화는 가죽의 뒷면, 속가죽을 가공한 소재를 사용한다. 일명 '썰무' 또는 '스웨이드'로 불리는 가죽이 육면 가죽이다. 육면 가죽을 사용한 전투화는 가죽의 겉부분을 가공한 은면 전투화에 비해 위장성과 손질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공이 어려워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



(왼쪽부터 시계방향) 지난해 11월 육군이 방산 전신회인 DX 코리아에 전시한 육면 전투화와 구매한지 1달 여만에 가죽이 훼손된 육면 전투화와 구매 당시 육면 가죽 부스러기가 묻어 나온 모습. /독자제공

자는 "일부 제품에서 가죽의 이상현상이 있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했고, 구매한 제품을 교환해 주고 있다"면서 "육면전투화와 관련해, 전투화 앞쪽은 등 가죽 등 견고한 소재를 써야한다 납품업체들에게 사전주의를 준바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전투화의 납품업체별 품질 차이가 주장이 나온 것은, 2015년 8월 육군 군수참모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하면서 부터다.

트렉스타가 개발한 고어텍스 소재 전투화는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받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납품이 됐다. 하지만, 한개 업체가 아닌 다수 업체간 공동납품 형식인 '콘소시엄 형태'로 납품업체 지정방식 바뀌면서 현재는 트렉스타, 엠플러스(군인공제회), 고려TTR, 삼덕, 익산하이테크 등 5개 회사 육군의 전투화를 납품하고 있다.

◆군이 요구한 물성치는 모두 충족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5개 납품 회사 모두 육면전투화를 개발한 트렉스타의 디자인과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발투습 기능소재는 트렉스타와 다

른 벤텍스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육면전투화의 경우 엠플러스와 익산하이테크는 트렉스타와 다른 가죽회사로부터 가죽을 구매했다.

벤텍스 소재는 국내업체가 개발해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의류에 적용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전투화 소재로 사용될 경우 납품가가 3000원 정도 저렴해진다. 다만, 장기간 약천후 등에 노출되는 군용품과 단기간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장기적 신뢰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육군전투화에 처음으로 벤텍스 소재를 적용한 엠플러스 관계자는 "벤텍스 소재는 군에서 요구하는 물성치(성능값)를 충족하고 있다. 2017년 검찰 수사에서도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군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몇 번을 세탁한 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물성치) 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피복물에 지난 12월에 (자사의) 육면전투화가 납품이 됐다"면서 "육면전투화 납품이 처음이다 보니 가죽 일부가 일어나거나 부스러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장병들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전투화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면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면가죽의 문제에 대해 원외제작업 관계자는 "전투화 생산업체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육면가죽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로스율이 높고, 가죽의 표면작업이 어려워 불량 징후가 보여지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엄선된 소재를 가지고 전투화를 만들수 있도록 전투화 납품업체들에게 정당한 입찰가를 제시하고, 명확한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그린바이오 벤처 10곳에 28억 지원

농식품부, 내달 18일까지 대상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그린바이오 5대 분야 기술기반 벤처 10곳을 선정해 총 28억원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18일(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식품창업정보망 누리집(www.a-startup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21일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전략분야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하는 5대 전략 분야는 ▲ 마이크로바이옴 ▲ 대체식품·메디

푸드 ▲ 종자 ▲ 동물용의약품 ▲ 기타 생명소재 분야다.

지원 기업에는 사업화자금으로 기업당 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 용도는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지원 외에도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업 선정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개별 통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파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3일부터 햅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파는 전년도 작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다. 올해 1~2월 양파 소매가격은 kg 당 3314원으로 전년(1750원) 대비 89.3%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2월17일까지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전년동기 수입물량의 4.5배 수준인 1만3715톤의 양파가 수입됐고,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관원은 관세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양파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